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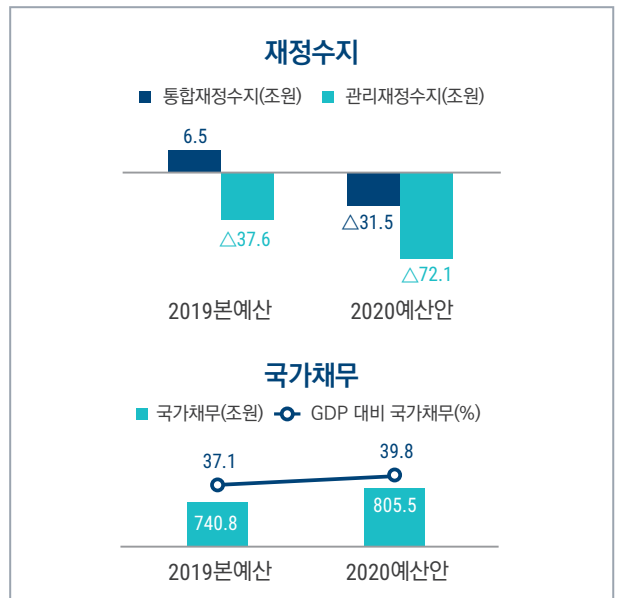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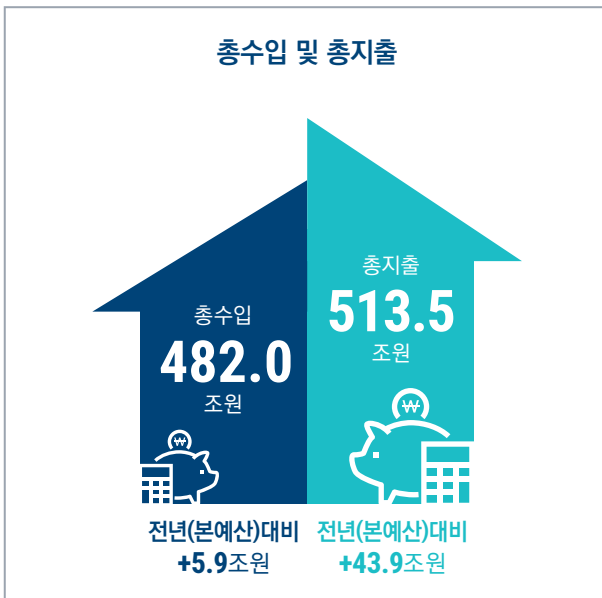
2020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예산분석실

“ 정부는 경기대응, 혁신성장,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하여 총수입 482.0조원, 총지출 513.5조원의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NABO는 2020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하여 정책 효과성,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I. 총괄분석

1. 재정총괄



*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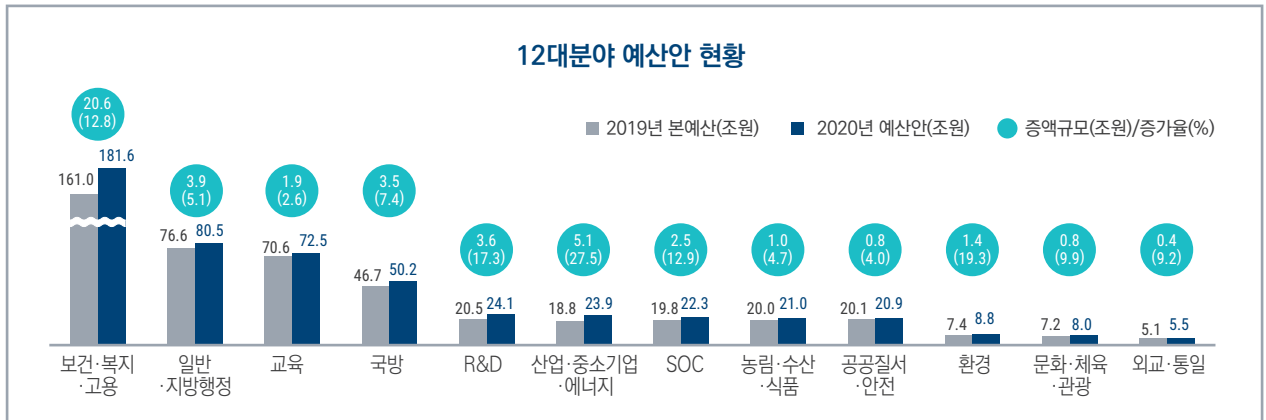
2. 예산안의 중점 투자부분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국민생활 편의 안전·증진	튼튼한 국방·외교
소재·부품·장비 공급안정 D.N.A + BIG 3 지원 미래인재양성 및 대학교육 혁신지원 제2벤처붐 확산	수출·투자·내수 활성화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일자리 지원	사회·고용·교육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스마트 인프라 확충 안전투자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저감투자 국민건강 증진 투자	자주국방 역량강화 평화통일 기반 구축 외교역량강화

* D.N.A: 데이터, 네트워크(5G), 인공지능(AI), BIG 3: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3. 분야별 자원배분

- 보건·복지·고용(증가규모), 산업·중소기업·에너지(증가율) 분야에서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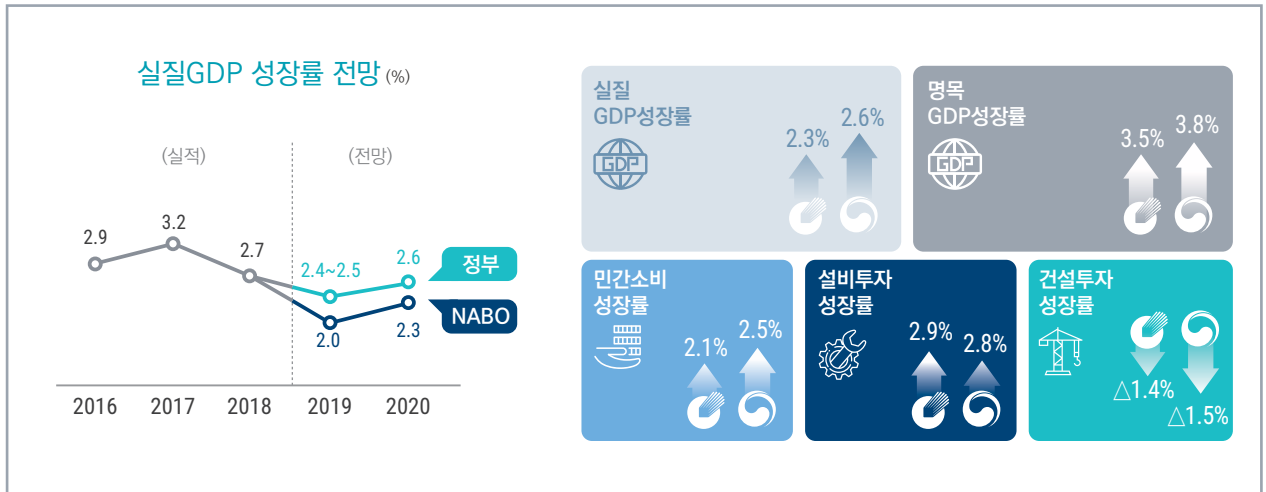


* ()안의 수는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

II. NABO 예산안 분석 개요

예산안 총괄분석 — 36개 주제 분석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478개 주제 분석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분석 — 6개 주요사항 분석 195개 주제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 총 21개 부처, 36개 사업 분석

III. 2020년도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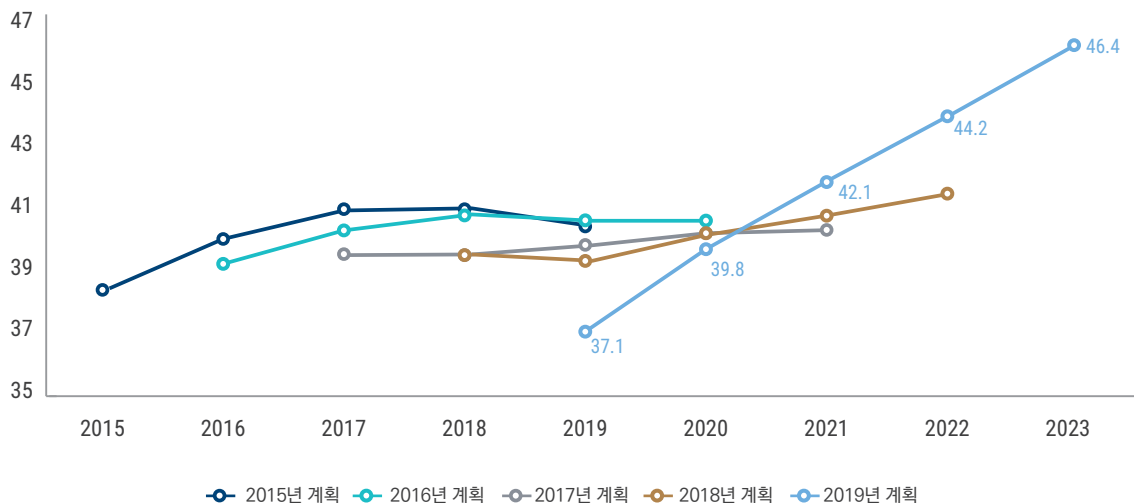
* NABO 전망 정부 전망

IV. 2020년도 예산안 주요특징 및 고려사항

1. 국가재정 운용계획

-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지속적인 재정확대 의지를 표명 → GDP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급격히 증가
-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향후 사회복지 지출수요에 대비한 적극적인 국가채무관리 노력 병행 필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GDP 비율의 연도별 계획 (단위: GDP 대비 %)



* 2019년 계획의 2019년 국가채무/GDP비율이 낮은 것은 2018년까지는 구계열GDP, 2019년부터 신계열GDP를 사용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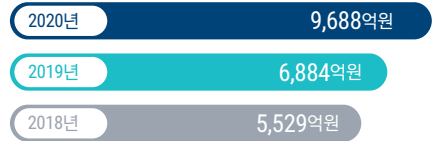
2. 조세지출 등 수입 분석

• 재정수입 확보 및 재정총량 교란 방지를 위하여 조세지출 및 국유재산 특례지출의 규모 관리 필요

국세감면액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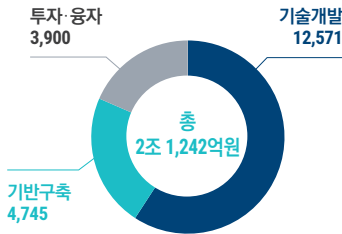
국유재산특례지출 증가



* 2018년은 실적, 2019년, 2020년은 계획

3. 주요산업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소재·부품·장비
지원사업 예산안 (억원)



• 기술력 및 투자여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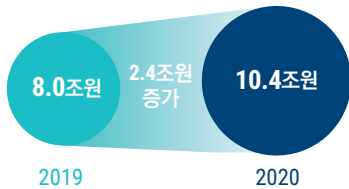
- R&D 성과의 사업화 등 기업의 후속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역량 있는 기업 선정 필요
- '12~'17년 기간 동안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지원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 증가
※ ('12)2.9% → ('13)4.5% → ('14)9.7% → ('15)10.4% → ('16)8.8% → ('17)12.3%

• 성과 제고를 위한 R&D과제 선정 필요

- 100대 전략품목('19년 추정 20대 품목, '20년 예산안 80대 품목)에 대한 비공개 결정
→ R&D과제 선정시 정부주도의 지정공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
- 정부주도의 기획 과제 중 사업화 실패 사례 존재
※ '16~'18년 종료된 정부 주도 241개 소재부품 R&D 과제 중 수요기업이 구매한 과제 17개(7.1%)

*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미만인 기업

4. 생활 SOC 사업 분석



• 생활 SOC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추진할 필요

- 보육교사 인건비, 교육비, S/W관련 사업 일부 포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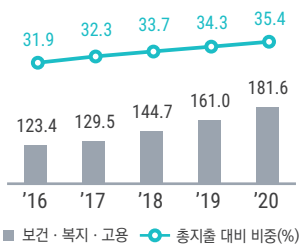
• 생활 SOC 시설의 향후 운영적자 해소방안 마련 필요

-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시설 확대공급에 따른 운영적자 규모는 증가
※ 개소당 순손실 규모: '14년 7.9억원 → '17년 10.4억원

• 성과 가시화를 위하여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 존재(도시재생(국토부), 복합편의시설 건립(행복청) 등)

5. 보건·복지·고용분야 재정지출



•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정지출 지속적 증가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 전년 대비 20.6조원(12.8%) 증가한 181.6조원, '19~'23년 연평균증가율 9.2%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 필요
※ 사전협의 미이행 사업 ①연령 조정으로 대상중복: 노인일자리(복지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고용부) ②지원범위 중복: 자활급여 자활장려금과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복지부)

• 일자리 예산 증가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관리 필요

- '20(인)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안은 전년 대비 4.5조원(21.3%) 증가한 25.8조원
- 일자리 예산의 59.3%는 고용 보험기금에서 충당, 재정수지 악화 우려